
정책참고자료

2018-16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노인 보행사망자 감소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의 핵심!

-행안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49개소 특별점검 추진-

————— 4

2 국민권익위원회

전통재래시장' 주차도로 이용 불편 '민원 가장 많아

- 추석 앞두고 '전통재래시장' 관련 민원 1,203건 분석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제공 -

————— 9

3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500억원 투자한다!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속성장(Scale-up)을 위한 자금공급 -

————— 17

4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배포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시 피해학생 참여 보장, 학교-경찰간 학교폭력 가해자정보를 14일 이내 신속히 공유 -

————— 19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개최

- 4차 산업혁명시대를 향한 열정, 장애인·고령층·결혼이민자 ICT능력 발휘 -

————— 23

6 문화체육관광부

온 가족이 함께하는 국내 최대 어르신 문화예술축제 개최

- 2018 실버문화페스티벌 어린이대공원(9. 8.~9.), 유니버설 아트센터(9. 11.) -

————— 25

7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 일자리 창출에 한 몫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2018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2개소 선정 -

————— 30

8 환경부

재활용을 넘어 순환경제로..제10회 자원순환의 날

- 9월 6일 '서울 재활용플라자'에서 쓰레기·플라스틱·회용품 등 3무(無) 행사로 자원순환 기념식 개최 - 35

9 고용노동부

고교·대학 과정 모든 현장실습생 22만명에 산재보험 적용

- 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질병 보상 재활훈련·직업교육까지 지원 - 42

10 여성가족부

“한 눈에 보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위한 안내!”

- 현장공무원 '10대 민원응대 수칙' 및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 마련, 위기상황인데... 몰라서 신청 못했던 긴급복지지원 받으세요! - 46

11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간 차별없이 이용

- 지자체별 상이한 운영 방식·절차의 최소기준 및 표준절차 마련 - 52

12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사업, 우리 어촌도 신청할 수 있을까?

- 11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 개최 사업 공모절차 등 안내 - 56

노인 보행사망자 감소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의 핵심!

- 행안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49개소 특별점검 추진 -

▶ 최근 3년간('15~'17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상위 5개소 현황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상가시장 부근(42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 부근(39건)
- 충북 청주시 육거리시장 부근(27건),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제일시장 부근(23건), 전남 여수시 중앙시장 부근(21건)

▶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특별점검 후 개선 사례

- 지난해 서울시 동대문구 경동시장 일대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전국 1위였으나 동대문구와 동대문경찰서에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차량 제한 속도 하향 및 중앙분리대 설치로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5명에서 올해 7월까지 7명으로 줄었다. 인근상인들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무단횡단 하는 노인들이 현저히 줄었다." 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9월 12일부터 19일까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경찰청과 지자체를 비롯하여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 및 대한노인회가 함께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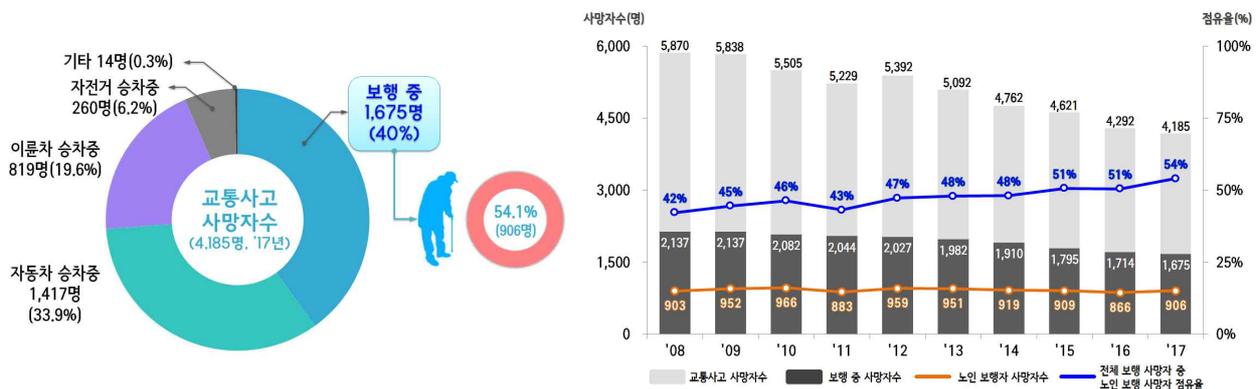
○ 점검대상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지난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552개소* 중 개선이 시급한 사고 위험지역 49개소**를 선정하였다.

* 반경 200m이내에서 노인 보행중 사고 3건 이상 발생지역(사망사고 포함시 2건 이상)

** 사고발생 7건 이상(특·광역시는 10건 이상) 또는 사망자 2명 이상 발

생지역

-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사고 위험지역 49개소에서는 작년에 총 323건의 교통사고로 사망자 51명, 부상자 313명이 발생하였다.
- 작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185명 중에서 보행 사망자는 40%(1,675명)이고, 그 중 노인 보행 사망자는 54%(906명)로 보행 교통사고 중 노인이 가장 취약한 실정이며, 지난 10년간 보행 사망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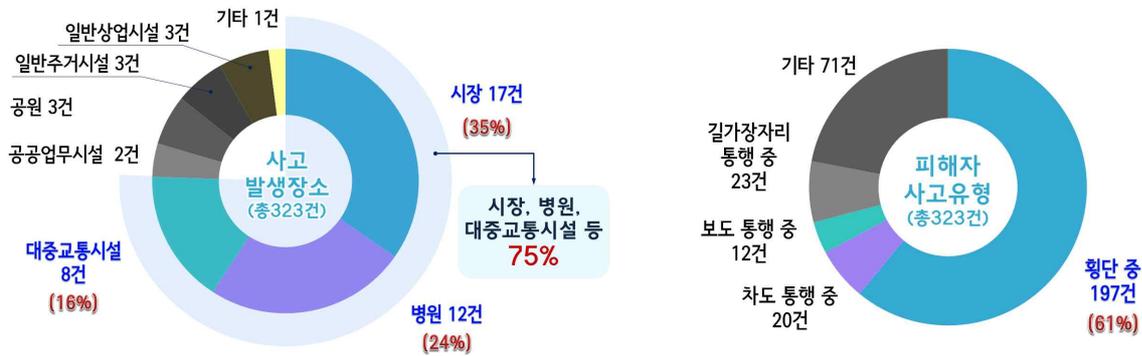


□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소는 시장, 병원 등 노인 유동 인구가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 부산 부전시장, 서울 청량리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등 9개소가 최근 3년간 중복 발생

- 전체 교통사고 323건 중 197건(61%)이 도로 횡단 중에 발생하였고, 시기별로는 날씨로 인해 행동이 느려지는 겨울철(11~1월, 93건)에 많이 발생하였다.
- 시간대별로는 활동인구가 많은 낮 시간(12~14시, 50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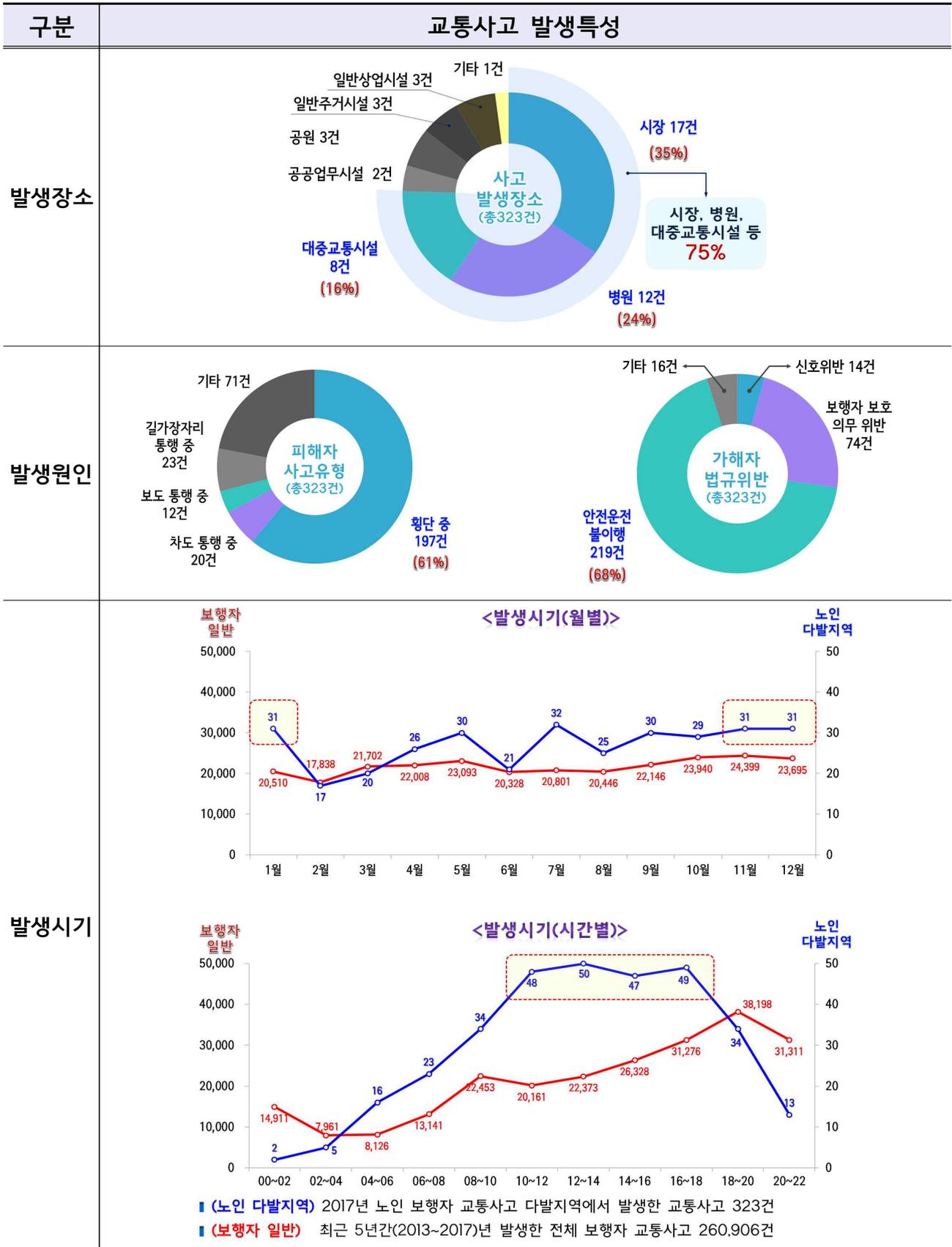
○ 행안부에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교통사고 현황분석, 교통안전시설 진단, 사고위험요인 등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이 새롭게 반영(20억원)되어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통해 노인 보행자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 이라고 말했다.

□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라며, “전체 보행 사망자 중 노인 사망자가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축에 정책 중점을 두고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정례적 진단과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참고 1

2017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사고 특성



참고 2

최근 10년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등

□ 최근 10년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2008~2017년]

(단위 : 명, %)

구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A)	보행중 사망자수(B)	노인 보행중		
			비율(B/A)	사망자수(C)	비율(C/B)
'08년	5,870	2,137	36%	903	42%
'09년	5,838	2,137	37%	952	45%
'10년	5,505	2,082	38%	966	46%
'11년	5,229	2,044	39%	883	43%
'12년	5,392	2,027	38%	959	47%
'13년	5,092	1,982	39%	951	48%
'14년	4,762	1,910	40%	919	48%
'15년	4,621	1,795	39%	909	51%
'16년	4,292	1,714	40%	866	51%
'17년	4,185	1,675	40%	906	54%

* OECD(65세 이상 노인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 2015) : 한국 13.7명, 네덜란드 0.7명, 영국 1.4명, 프랑스 1.9명, 일본 3.8명, / 평균 3.0명

□ 노인보호구역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 및 제138조의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지정대상) 노인주거·의료·여가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 (지정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노인보호구역 지정개소	626	697	859	1,107	1,299
노인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건수	4	5	5	5	15
노인 보호구역내 사망자수	3	1	2	-	3

전통재래시장 ‘주차·도로 이용 불편’ 민원 가장 많아

- 추석 앞두고 ‘전통재래시장’ 관련 민원 1,203건 분석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제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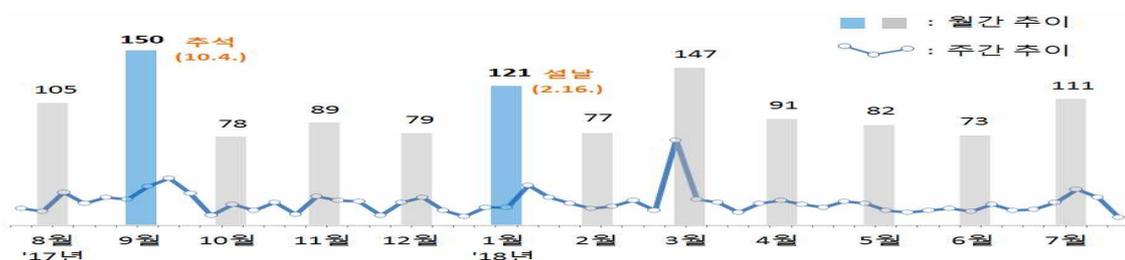
- 전통재래시장 관련 민원 절반 이상이 ‘시설 이용 불편사항’으로 이중 ‘주차·도로 이용 불편’이 42.7%로 가장 많았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재래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주변 도로와 주차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재래시장을 찾는 국민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통재래시장 관련 민원 1,203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새올 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국민권익위의 민원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통재래시장 관련 민원은 명절시기와 맞물려 지난해 추석 전인 9월과 올해 설날 전 달인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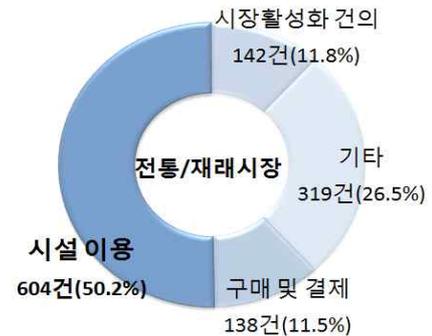
< 최근 1년간 전통시장 민원 추이(2017. 8. ~ 2018. 7.) >



※ '18. 3. 시장 내 개도살장 관련 민원으로 일시 증가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전통재래시장 시설 이용 불편' 관련 내용이 전체의 50.2%로 가장 많았고, '전통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건의'(11.8%), '물품 구매 및 결제 관련 불편사항'(11.5%) 순으로 나타났다.

< 전통.재래시장 관련 민원 유형 >



'전통재래시장 시설 이용'과 관련해서는 '주차 및 도로 이용 불편'이 42.7%(25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노점 및 무단적치물로 인한 통행 불편' 민원이 19.7%(119건)로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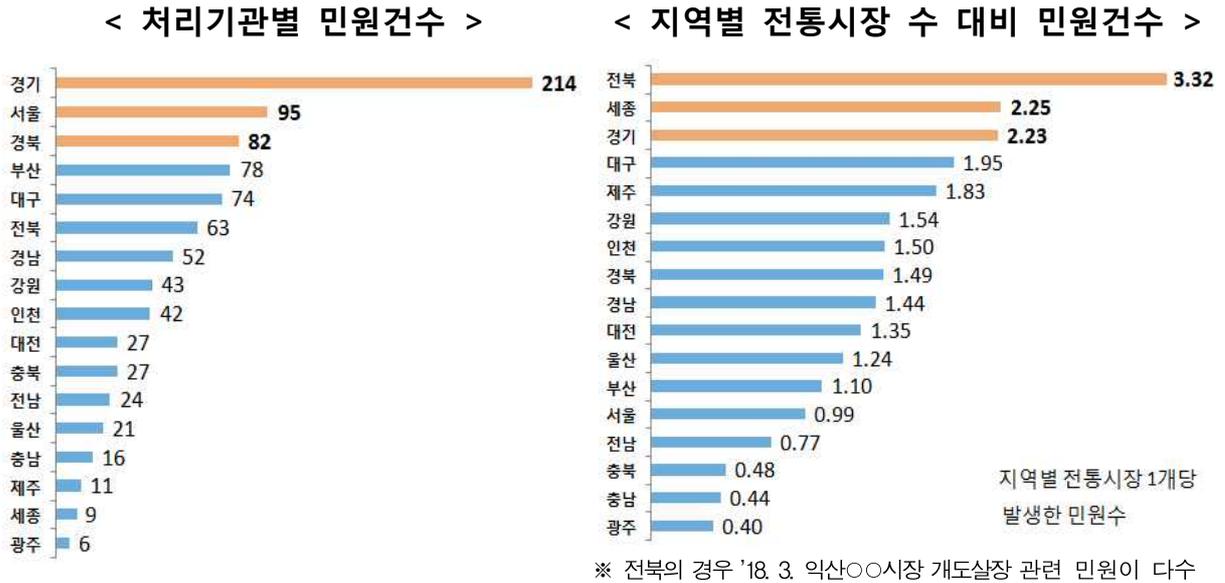
그 외 대중교통 시설 불편(11.1%, 67건), 쓰레기·악취 등 환경시설 관리 불만(10.6%, 64건), 위법건축물 관리 요구(7.6%, 46건) 순이었으며, 소방·전기 등 안전시설 문제점을 지적한 민원(3.8%, 23건)도 있었다.

'전통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건의'로는 '주차료 및 공공재산 사용료 감면, 홍보, 연말정산 소득공제 확대 등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5.8%로 가장 많았으며, 시장 인근에 대형마트 입점 반대와 관련된 민원이 20.4%를 차지했다.

'구매 및 결제 관련 불편사항' 중에서는 '온누리 상품권 이용 불편 및 개선 요구'가 31.2%(43건)로 가장 많았고, '판매 물건의 품질 불량 및 불친절(29.7%)'과 관련된 내용이 뒤를 이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거부(22.5%), 무허가 품목 판매(13.8%),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2.2%) 등에 대한 신고성 민원도 상당수 있어 추석을 앞두고 시장 상인들에 대한 교육·홍보와 관련기관의 지도·점검도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전통재래시장 관련 민원 신청인은 주로 30, 40대가 많았으며, 민원 처리기관은 경기, 서울, 경북 등의 순이지만 지역별 전통시장 수를 고려하면 전북, 세종, 경기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 국민권익위는 전통재래시장을 관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민원분석 결과와 사례 등을 제공하여 불편사항을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전통재래시장을 많이 찾는 명절기간에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장 주변도로의 주차 허용과 원활한 교통 흐름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 민원 추이

- 최근 1년간 ('17년 8월 ~ '18년 7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정보 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통·재래시장 관련 민원은 총 1,203건(월 평균 100.2건)
- 명절시기와 맞물리는 '17년 9월과 '18년 1월에 가장 많이 발생

< 최근 1년간 전통시장 민원 추이 >



※ '18. 3. 전통시장 내 개도살장 신고 관련 민원(전북)으로 일시 증가

2 신청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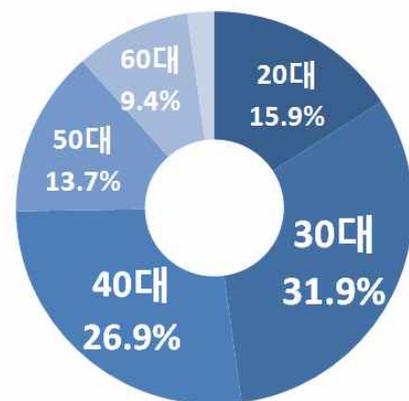
- (성별) 남성이 54.7%(390명), 여성이 45.3%(323명)로 남성이 다소 많음

※ 성별 구분이 확인되는 713건 대상

- (연령별) 30대 31.9%(322명), 40대 26.9%(272명), 20대 15.9% (161명), 50대 13.7%(138명), 60대 9.4%(95명) 순임

※ 연령 구분이 확인되는 1,010건 대상

< 연령별 민원신청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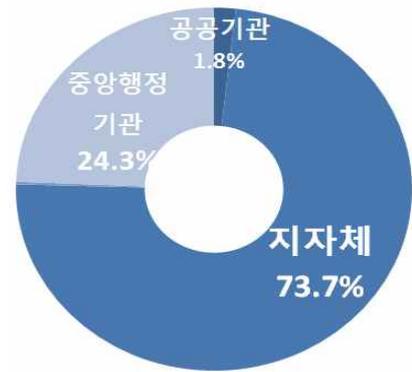
③ 처리기관 현황

○ 기관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73.7%(884건)로 가장 많고, 중앙행정기관 24.3%(292건), 공공기관 1.8%(21건) 순임

-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가 24.2%(214건)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10.7%(95건), 경북도(82건), 부산시(78건), 대구시(74건) 순이며, 광주시가 6건으로 가장 적음

-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이 34.2%(100건)로 가장 많고, 중기부 28.4%(83건), 국세청 11.3%(33건), 국토부 7.9%(23건)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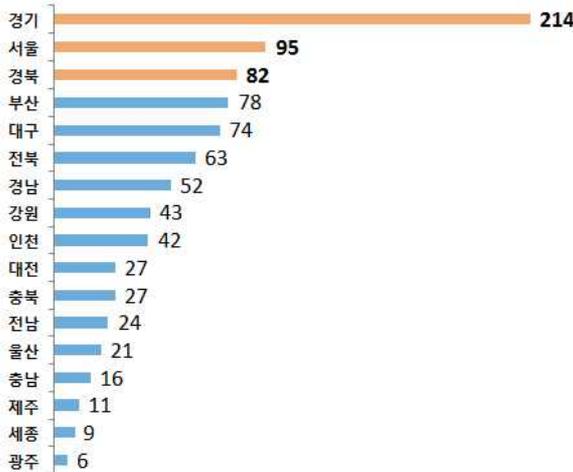
< 기관유형별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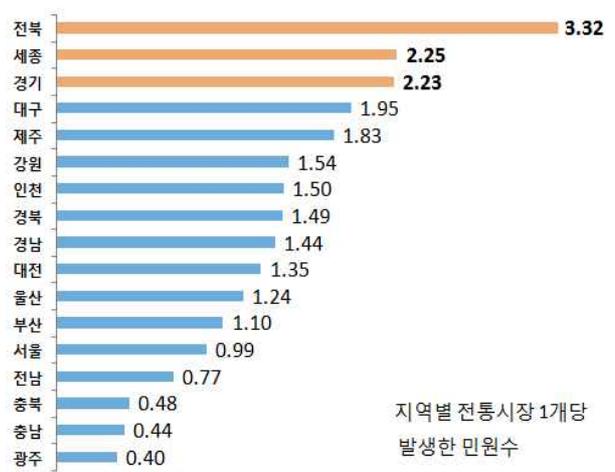
※ 경찰청의 경우 개도살장 등 동물학대 및 교통위반 신고가 다수

○ 지역별 전통시장 수를 고려할 경우, 전북, 세종, 경기 등이 상대적으로 많고, 충남, 광주 등이 적은 편임

< 처리기관별 민원건수 >



< 지역별 전통시장 수 대비 민원건수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인정한 전통시장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지하도) 점포 모집단 구축조사, 201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서울(96), 부산(71), 대구(38), 인천(28), 광주(15), 대전(20), 울산(17), 세종(4개)

- 경기(96), 강원(28), 충북(56), 충남(36), 전북(19), 전남(31), 경북(55), 경남(36), 제주(6)

4 민원 유형별 주요사례

시장 시설 이용 관련 민원 사례

[공영주차시설 확충]

- 전통시장 살리자고 공무원에게 억지로 전통시장 상품권까지 강매하는 세상입니다. 주차시설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서 전통시장 이용하랴구요? 차라리 시원하고 주차를 편히 하는 대형마트로 가겠음

[부당한 주차과태료 부과]

- 추석 연휴에 친지 방문으로 경기 ○○시내의 전통시장을 이용하였는데, 지역 축제 기간이고 휴일에는 단속을 안 한다는 친지 말에 시장 도로변에 주차를 하였는데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음. 추석 연휴에 단속한 의도를 모르겠음

[도로관리 미흡]

- 전통시장 내 도로에 상하수도 공사를 하며 마무리 작업도 없이 바닥에 부직포 하나 깔아놓고 중단됨. 바닥은 푹푹 파여서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유모차들이 다니다가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물건 무단적치로 통행 불편]

- 전통시장 내 고객선*(노란선)을 잘 지키는 상점도 있는 반면, 노란선 밖으로 1m이상 물건을 진열해서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특히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음

*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상품진열 한도선이며, 한도선 내 물건적치는 단속유예

[차량노점 단속 요구]

- 불법적인 차량 노점으로 인해 시장 이용 고객은 정작 보호받고 다녀야 할 인도를 벗어나 도로로 보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고객 보호와 정상 영업하는 상인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함

[쓰레기 처리 불만]

-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과 전통시장에 장보러 갔는데 길에 쓰레기가 넘쳐나는 너무 더러운 환경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음. 건물 환경은 잘 가꿔졌는데 사람들의 문제인지, 환경을 관리하지 않는 시청의 문제인건지 잘 모르겠음

[전기안전 시설 미흡]

- 얼마 전 뉴스에 전통시장 대형화재의 원인이 분별없이 위험하게 사용하는 전기 콘센트라는 걸 보았는데 이곳도 그런 곳이 아닐까함. 전통시장 대형화재의 교훈을 무시하지 말고 화재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마련이 필요함

시장 활성화 관련 민원 사례

[공영 주차료 지원]

- 대형마트를 이용한 고객에게 마트측이 주차료를 받는다면 좋아할 고객이 없을 것임. 전통시장은 주차하기도 어려운데 주차료를 받는다면 더 방문하기 싫어질 것이므로 시장이용이 확인되면 무료주차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함

[전통시장 사용금액 연말정산 인정 불편]

- ○○시장 구입금을 전통시장 이용 공제로 인정받아 연말정산 혜택을 보아 금년 더 많은 상점에서 상당한 금액을 사용하였는데, 많은 금액이 공제 누락됨. 같은 상권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통시장이 아닌 상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가 안 된 것이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같은 상권에서 어디까지가 전통시장인지 쉽게 알 수 없어 불편함

[전통시장 이용 홍보]

- ○○시청 홈페이지에서 전통시장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는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음. 주변에 전통시장이 어디에 있고, 어떤 것을 구입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 항상 링크를 걸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우체국 택배비 지원]

- ○○전통시장에서 건어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우체국 택배계약으로 한 달 택배 100개 유지시 30% 비용할인을 받고 있지만, 100개 유지가 어려워 계약해지 예정인데 매월 100개의 택배를 유지하는 전통시장 상인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임

결제 및 구매 관련 민원 사례

[대형마트의 온누리 상품권 취급]

- 전통시장 인근 약 100평이 넘는 □□마트가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해서 전통시장에 들어와야 할 상품권이 □□마트로 들어가는 실정임. 전통시장을 위해서 나온 상품권이 전통시장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함

[상품권 유효기간 폐지]

- 현금을 주고 구매한 온누리 상품권 유효기간이 임박해 문의하니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음.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사용을 매장에서 거부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못하는 줄 알고 버리는 소비자도 있을 수 있으니 상품권 유효기간을 폐지해 주기 바람

결제 및 구매 관련 민원 사례

[상품권 할인가 구매 상황 유지]

- 상품권 10% 할인가 구매가 5%할인으로 축소하고 구매 한도액을 50만원으로 상향하였다고 하는데, 시장에서 상품권을 50만원씩 사용하는 일은 별로 없음. **상품권 10% 할인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임**

[상품권 판매 채널 확대]

- 상품권은 은행에서만 구입이 가능한데 은행 업무가 4시면 마감되어 일반 직장인은 구입하려면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문화상품권처럼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거나 은행 외에서도 살 수 있으면 좋겠음**

[선물용 전자상품권 도입]

- 현재 정부 각 기관이나 공기업 등에서 응모나 토론 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지급하는 기프트 쿠폰이 있는데 대부분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음. 이런 기프트 쿠폰을 **전통 재래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쿠폰으로 전환**한다면 도움이 될 것임

[상품권 사용가능 점포 안내 개선]

-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때, 상품권 사용이 되는 지, 들리는 점포마다 일일이 물어보는 번거로움이 있음. 신용카드 결제가 되는 점포의 경우 가능 카드가 무엇인지 스티커를 붙여 안내하는 것처럼 **상품권을 취급하는 점포인지 고객이 알기** 쉽도록 스티커를 붙인다면 편리하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카드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 경남 ○○시장에 있는 회집에 회를 사고 카드가 되냐 물어보니 현금으로 만 구매된다고 해서 현금을 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했는데 거부당해서 불쾌**했음. 타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도 같은 상황이라면 불쾌해 할 것임

[카드사용 교육 필요]

- 가까운 재래시장에서는 **소액 카드결제를 대부분 거부하고 있음**. 소액으로는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기가 어려워 먼 대형마트까지 가야하는 경우가 있어 너무 불편하니 **위법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주시고, **시장 상인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500억원 투자한다!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속성장(Scale-up)을 위한 자금공급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500억원 투자한다!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속성장(Scale-up)을 위한 자금공급 -

- 일자리 창출 성과가 높은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매칭투자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창업자, 임직원도 투자성과를 공유하는 콜옵션 제도 최초로 도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 지속성장(Scale-up) 할 수 있도록 후속투자하는 펀드가 최초로 결성되어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된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한국벤처투자(주)(대표이사 주형철)는 “일자리 창출 성장지원펀드(이하, 일자리 매칭펀드)”를 506억 규모로 결성하고 투자 설명회를 9.13(목) 개최한다고 밝혔다.
 - * 추가경정예산 500억, 한국벤처투자 6억원
- 동펀드는 일자리창출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중심으로 VC가 투자한 기업에 매칭하는 방식으로 유망기업의 지속성장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성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 (대상) 투자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중진공 정책자금, 중소기업R&D 성공, 기보 보증 등의 실적이 있는 기업 중에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거나, 향후 기대되는 기업으로,
 - * 실적일 이후 20명 이상 고용증가, 연평균 40% 이상의 고용증가율, 투자금액 1억원당 1명 이상의 고용효과 달성한 기업
 - (내용) VC가 투자하는 동일 조건으로 기업당 50억원까지 매칭투자하며, 이를 통해 투자받은 기업은 최대 2배의 자금을 유치하여 고용 및 지속

성장(Scale-up)을 위한 충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 (절차) 일자리 매칭펀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매칭 투자하는 VC가 매월초 한국벤처투자에 접수하면 된다.

벤처투자를 통한 일자리 증가 사례

- ◆ 온라인게임 업체 A사는 인재채용, 사업확장 등 성장자금 조달을 위해 '13년부터 '17년까지 매년 투자를 유치(총 388억원)하였음.
 - 그 결과, '13년 68명이었던 직원이 '17년 323명까지 4.75배 증가하는 등 255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매출액 규모도 '13년 20억원에서 '17년 1,172억원 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임
 - * 고용인원(명) : ('13) 68 → ('15) 108 → ('17) 323
 - * 매출액(억원) : ('13) 20 → ('15) 217 → ('17) 1,172
 - 더불어, 투자기업의 창업자·임직원 등에 **일자리 매칭펀드 투자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최대 60%*까지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임직원이 동펀드가 보유한 회사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 취득가격 = 투자원금 + 이자 (한국은행 기준금리+0.5%가산)
 - 콜옵션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은 우수 인재 채용이 용이해지고 창업자·임직원 등과 기업 성장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인센티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 투자기업의 창업자·임직원에 최대 40%, 매칭투자 VC에 최대 20%이내에서 일자리 창출 성과에 따라 차등 부여
 - 중소벤처기업부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일자리 창출 성장지원 펀드가 좋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벤처기업의 지속성장(Scale-up)에 기여할 것”이며,
 - 특히, “콜옵션은 우수 인재 영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의 갈증을 해소하고, 임직원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 배포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시 피해학생 참여 보장,
학교-경찰간 학교폭력 가해자정보를 14일 이내 신속히 공유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4년에 보급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개정판을 제작하여 9월 10일 전국의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에 배포하였다.

※ 파일형태의 자료를 시도교육청에 보내고, 교육청별 예산을 활용해 책자로 제작하여 보급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이란?

-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설과 교육부 지침 및 유권해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내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교육청 업무담당자 및 단위학교 교사, 학부모 등이 관련 법령 등을 쉽게 이해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지난 가이드북 보급 이후에 변경된 법령 및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임
-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를 중심으로, 현장 교원,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변호사 등을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2학기가 시작되는 신학기에 맞춰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제작을 준비함

- 가이드북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학교폭력 재심절차의 공정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하였다.

※ 기존에는 피해학생측에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와 방법을 가이드북에 명시함

개정전	개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기관이 달라 피해학생이 그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함 ※ 가해학생: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피해학생: 시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에 피해학생의 참여를 보장 - 피해학생에게 가해측의 재심청구사실을 통보하고 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에 대한 안내를 실시함

-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전국에 설치된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을 안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수록하였다.
- 아울러,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18.8.31)」에 포함된 학교-경찰 간 가해자 정보 신속 공유 체계도 및 관련 내용 등도 반영하였다.
- ※ 기존에는 경찰에서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못해, 학교 현장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에 어려움을 호소함



※ 14일 이내 학교폭력 가해자의 신상정보 및 사건개요를 학교측에 제공

【학교-경찰간 가해자 정보 신속공유 체계도】

❖ 용어설명 : SPO (School Police Officer, 학교전담경찰관) / 전담기구 : 학교내에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기구(부서)

- 이밖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종 양식들을 통합하고, 필수서식과 선택서식을 분리하여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진행 시나리오,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를

부록에 수록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의 1차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가이드북이 학교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설명하며,
- “지난 8월 31일 개최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학교폭력 관련 제도 개선 과제*들은 앞으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할 것이며, 관련 내용을 가이드북에 추가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공동개최, 재심기관 일원화, 단순·경미한 학교 폭력 사건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 등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p18~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징후(피해학생 및 가해 학생의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징후(피해학생 및 가해 학생의 징후)를 일부 수정하고, 최근 증가추세의 사이버폭력 피해 징후 추가
p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사안조사시 유의사항만 수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조사 과정에서 장애학생 및 중도입국·외국인학생과 탈북학생들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록
p62~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내용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기준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교육부 고시 제2016-99호) 내용 추가
p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 기관이 달라 피해학생이 그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함 ※ 가해학생: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피해학생:시도 학교폭력대책지역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에 피해 학생의 참여를 보장 - 피해학생에게 가해측의 재심청구 사실을 통보하고 자료제출 및 출석 진술에 대한 안내를 실시함
p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는 경찰에서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못해, 학교현장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에 어려움을 호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경찰 간 가해자 정보 신속 공유 체계도 및 관련 내용 수록
p88~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세부 안내 사항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학생 지원을 위해,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 피해관련 지원 프로그램, 화해 분쟁 조정 기관 등에 대한 안내 사항 추가

2018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개최

- 4차 산업혁명시대를 향한 열정, 장애인·고령층·결혼이민자 ICT능력 발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이 주관하며 KT, SK텔레콤, LGU+, 한글과컴퓨터,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등이 후원하는 '2018 국민행복 IT 경진대회'가 9월 4일 백범김구기념관(서울 효창동 소재)에서 개최되었다.
- 올해로 16주년을 맞이하는 '국민행복 IT 경진대회'는 전국의 장애인·고령층·장년층·결혼이민자가 정보활용 능력을 겨루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경진대회이다.
- 올해 행사는 하나 된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나누는 디지털 세상을 구현하자는 의미로 "너, 나, 우리가 함께하는 I-KOREA40"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 이번 대회는 지난 7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예선대회에서 평균 7.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본선에 참가한 320명(장애인 124명, 고령층 112명, 장년층 56명, 결혼이민자 28명)과 가족 및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 대회 참가자 중 최연소자는 16세(장애인 부문, 부산), 최고령자는 87세(고령자 부문, 제주)였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결혼이민자 출신도 참가

하여 PC,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정보검색, 주문예약, 문서작성 등 정보 활용 능력을 겨루었다.

- 시상식에서는 본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문별 수상자에게 국무총리상(3점), 과기정통부장관상(8점)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후원기관장상 등 총 56점의 상장이 수여되었으며, 부상으로 소정의 상금도 주어졌다.

※ 국무총리상 수상자 : 이건호(장애인 부문, 서울), 이승부(고령층 부문, 서울), 박승빈(장년층 부문, 서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대상) 수상자

구분	수상자 명단
장애인 부문 (지체, 지적, 시각, 청각)	김지현(경기), 김승우(경북), 박단우(충남), 이주환(경기)
고령층_1부문(75세 이상)	신일학(대구)
고령층_2부문(65~74세)	조형건(서울)
장년층 부문(55~64세)	오대석(부산)
결혼이민자 부문	김연실(서울)

-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민행복 IT경진대회’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 정보격차해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라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민 누구나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국내 최대 어르신 문화예술축제 개최

- 2018 실버문화페스티벌, 어린이대공원(9. 8.~9.), 유니버설 아트센터(9. 11.)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김태웅)가 주관하는 '2018 실버문화페스티벌'이 ▲ 9월 8일(토)~9일(일) 어린이대공원과 ▲ 9월 11일(화) 유니버설 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실버문화페스티벌'은 어르신들(실버세대)에게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필요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 전국 규모의 어르신 문화예술축제다.

□ 2018 실버문화페스티벌 행사개요

- ◆ (일시·장소) (9. 8~9.) 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 (9. 11.) 유니버설 아트센터
- ◆ (참 석) 어르신 문화단체, 동호회, 관람객 등 3,000여 명
- ◆ (주요행사) 샤이니스타를 찾아라(어르신 공연 본선 경연), 문화나눔광장(전시, 체험, 어르신 관련 정보 제공), 어른이 행복무대(공연) 등

'어른이 행복무대', '문화나눔광장'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 진행

9월 8일(토)과 9일(일) 어린이대공원에서는 '어른이 행복무대'와 '문화나눔광장'을 진행한다. ▲ '어른이 행복무대'에서는 무용과 합창, 사물놀이, 라인댄스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 '문화나눔광장'에서는 건강과 교육, 금융 등,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종이상자 가면, 자투리 나무 인형, 핸드폰 거치대 만들기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전국에서 선발된 25개 어르신 공연팀, '샤이니스타를 찾아라'에서 경연

어르신들의 문화예술 경연대회인 '샤이니스타를 찾아라'는 지역 예선 참가자가 지난해 2,700여 명에서 올해 3,900여 명으로 증가하는 등, 어르신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대표축제로 자리 잡았다.

올해 지역 예선은 지난 6월과 7월 전국 10개 권역에서 펼쳐졌으며, 치열한 경쟁을 거쳐 무용, 연주, 합창,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종 25개 팀(어르신 550여 명)이 선발됐다. 본선 경연은 9월 11일(화) 오후 1시, 서울 유니버설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다. 본선에서는 전국의 끼 있는 어르신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낼 예정이며, 어르신문화 홍보대사인 배우 이순재 씨도 참석하여 어르신들을 응원한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http://www.silverfestival.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실버문화페스티벌'은 단순히 노년층을 위한 문화행사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여유롭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 어르신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축제"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다양한 문화 예술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버문화페스티벌'을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세대 간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행사 포스터

2. 행사 사진

3. '2018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지역별 본선 진출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원연합회
The Federation of Korean Cultural Center

2018 실버문화 페스티벌



9.8(토)~9.9(일) | 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 일원

9.11(화) | 유니버설 아트센터 대극장

어른이 행복무대 | 문화나눔광장 | 사이니스타를 찾아라



2017 실버문화페스티벌 시상식



2017 실버문화페스티벌 본선경연



2017 실버문화페스티벌 본선경연



2017 어른이 행복무대 행사



2018 실버문화페스티벌 지역예선(대구경북)



2018 실버문화페스티벌 지역예선(대구경북)



2018 실버문화페스티벌 지역예선(부산울산)



2018 실버문화페스티벌 지역예선(부산울산)

□ 본선 진출팀 명단

No	참가자(팀)명	내용(장르)	비고
1	(사)궁중무용춘앵전보존회 종로궁중무용협회	한국무용	서울(3)
2	(강화문화원) 열두가락교실	농악	
3	(서초문화원) 서초문화원무용단	한국무용	
4	(부안문화원) 부안하모닉스색소폰앙상블	색소폰	전북(3)
5	(양지노인복지관) 온누리무용단	춤(살풀이)	
6	(사)한국생활음악협회 익산지부 김나연소리동행실버악단	악기 합주	
7	(버드내노인복지관) 사운드파파	악기연주	인천/경기(3)
8	(수원문화원) 검정고무신	악기연주 (장구/광대)	
9	(성남문화원) 은가락지	악기연주	
10	(거제2동 장구교실) 한울림 어울마당	타악	부산/울산(2)
11	(연제문화원) 연꽃무용단	한국무용	
12	(서천노인복지관) 신나리팀	댄스스포츠	충남(2)
13	(아우내 농협) 해오름 풍물단	풍물	
14	(창원문화원) 회산합창단	합창	경남(2)
15	(진주문화원) 소리샘	악기연주	
16	(사단법인 청아전통예술진흥회) 청아 예술단	전통무용	대구/경북(3)
17	(대구 서구문화원) 날뫼 어르신 풍물단	풍물	
18	(예천문화원) 그린실버관악합주단	악기연주(관악합주)	
19	광주아시아실버윈드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광주/전남/ 제주(2)
20	(곡성문화원) 할머니극단“곡성”	연극	
21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춘천실버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강원(3)
22	(고성문화원) 아리아리에술단	악기연주	
23	(강릉북부노인종합복지관) 북부노인종합복지관 가곡교실	합창	
24	(다스타 오카리나앙상블) 황은주 오카리나앙상블	악기연주(오카리나)	대전/세종/ 충북(2)
25	(월평1동 동사무소) 월평1동 실버무용단	댄스(하와이안무용)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 일자리 창출에 한 몫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2018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2개소 선정 -

《 주 요 내 용 》

◇ 농식품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2018년 균형발전사업(지역 지원계정) 평가에서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으로 추진한 강원, 경남 지역 2개소가 우수사례로 선정

<우수사례>

- ① 강원 홍천(명동지구) : 친환경농산물 제조·가공시설 및 체험장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농산물 가공확대로 부가가치 창출, 농가 수취가 상승, 지역일자리 창출, 6차산업화(김치체험행사)모델 안착
- ② 경남 하동(화개동천지구)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시설 조성을 통한 품앗이단 조직 및 공동수매로 농가소득 증대, 유기농 녹차 가공 확대로 지역일자리 창출, 유기농 녹차 수출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2018년 균형발전사업(지역지원계정) 평가에서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으로 추진한 강원, 경남지역 2개소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우수사례 : 강원 홍천 명동지구, 경남 하동 화개동천지구

○ 16개 부처가 2017년도에 추진한 균형발전사업 총 76개 사업에 대해 균형발전 기여도와 사업기획·집행·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농식품부의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이 매우우수(90점)를 획득하여 우수사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 우수사례로 선정된 법인은 9. 13(목) 전주 호텔에서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송재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 수상법인 : 피내뜰영농조합법인(이규형), (주)농업법인 동천(김종균)

□ 일자리창출 사례로 선정된 강원 홍천 명동지구(피내뜰영농조합법인)는 친환경 고랭지 배추 생산을 규모화하고, 친환경농산물 제조·가공시설 및 체험장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외연 확대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농산물 가공 확대로 부가가치 창출, 농가 수취가 상승, 지역일자리 창출, 6차산업화(김치체험행사)모델을 안착시켰다.

▶ 사례유형 : 일자리창출(농업인 소득증대 및 일자리창출,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 우수사례

- 친환경농산물(배추) 계약재배 : ('16) 28농가, 154톤 → ('17) 33농가, 197톤(28% ↑)
- 지역 일자리 창출 : ('16) 18명 → ('17) 20명 → ('18) 24명 목표
- 가공·체험·판매를 통한 6차산업화 모델 정착(방문객 수) : ('16) 400명 → ('17) 500명
- 친환경농산물 가공 소득증대 : ('16) 24.9억원 → ('17) 25.9억원
-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16) 241.6ha → ('17) 256ha(증15ha)

□ 균형발전 및 사회적가치 사례로 선정된 경남 하동 화개동천지구(농업법인 동천)는 유기농 녹차를 농가로부터 적정 가격에 구매하여 중국, 대만 등 수출을 추진하는 등 유기농 녹차 경쟁력을 제고 하고 있다.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시설 조성을 통한 품앗이단 조직

및 공동수매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켰으며, 유기농 녹차 가공 확대로 지역일자리 창출 등 유기농 녹차 6차산업화를 정착시켰다.

▶ 사례유형 :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지역 유기농 공동체 활성화로 대표 친환경마을 육성)

▶ 우수사례

- 3개 품앗이단 조직 및 공동수매로 소득증대 : ('16) 10.5억원 → ('17) 17.5억원
- 친환경 가공시설 확충 및 채엽장비 도입으로 일자리 증가 : ('17) 15명 → ('18) 21명 목표
-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확대 : ('16) 73.3ha → ('18) 93.1ha(증 19.8ha)
- 유기농 녹차 6차 산업화로 매출 증대 : ('16) 23억원 → ('17) 32억원 → ('18) 35억원 목표
- 중국, 대만 등 수출 추진 : ('17) 7톤, 2억원 → ('18) 10톤, 3억원 목표

□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은 토양, 수질 등 농업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 “앞으로 생산·가공·체험·교육이 연계되는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를 계속 조성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시작한 1995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현재 1,253개소(지구 1,198, 광역단지 48, 보완 7)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과 지속가능한 농업생태계 보전·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참고1

2018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계획

1.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018.9.13.(목), 호텔르윈(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 (주최·주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참석대상) 수상단체장(기관장) 및 관계공무원 등 200여명
- (참석신청) 균형발전포털(www.redis.go.kr)에서 온라인 참가신청

2. 주요 내용

일정	행사명	주요내용
9.13. (목)	지자체장 오찬간담회	- 수상 지자체장(부단체장) 오찬간담회 * 우수사례 수상 지자체 치하, 애로·건의사항 청취
	우수사례 시상식	- 우수 지자체(기관)* 및 개인** 표창 * 자율계정 20개, 지원계정 10개, 시도메타평가 1위 ** 자율계정 31명, 지원계정 18명, 시도평가총괄 1명
	우수사례 발표회	- 우수사례 자율계정 2개, 지원계정 1개 발표

3. 세부 일정

일시	주요내용	비고		
9.13. (목)	1부	14:00 ~ 14:05	개회 및 내빈소개, 일정안내	사회자
		14:05 ~ 14:10	개회사	위원장님
		14:10 ~ 14:15	환영사	전북도지사
		14:15 ~ 14:20	격려사	KEIT 원장
		14:20 ~ 15:20	우수 지자체(기관) 및 개인 표창	균형위원장
		15:20 ~ 15:30	휴식	귀빈 퇴장
		2부	15:30 ~ 15:40	'18년 평가결과 시사점
	15:40 ~ 15:50		우수사례 총평	평가자문단장
	15:50 ~ 16:00		우수사례 발표(자율계정) I	
	16:00 ~ 16:10		우수사례 발표(자율계정) II	
	16:10 ~ 16:20		우수사례 발표(지원계정) III	
	16:20 ~ 16:30		폐회안내	기념품 배포
	16:30		행사종료	-

1. 친환경농업지구조성

- (목적)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으로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
 - 들녘 및 농지구역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
- (지원대상) 생산자단체(농경지 10ha이상, 10호 이상)
- (지원내용) 유기농업자재 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시설·장비,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장비, 농업인역량강화, R&D, 홍보·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
- (사업기간) 1~2년을 원칙 하되, 여건 등에 따라 1년 추가 가능
- (지원조건) 자치단체자본보조, 총사업비 1~20억원(국비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2. 단지·지구 보완사업

- (목적) 기 지원된 단지·지구 중에서 우수한 지구·단지 지원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판매시설 및 농업인 교육과 소비자 현장체험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추가·증설 및 개보수
- (지원대상) 기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 생산자단체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 사업성과가 우수한(인증면적 증가 등) 단지·지구
- (지원내용) 유기농업자재 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시설·장비,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장비, 농업인역량강화, R&D, 홍보·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
- (사업기간) 1년(당해년도 국고 100%)
- (지원조건) 자치단체자본보조, 총사업비 10~20억원(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재활용을 넘어 순환경제로...제10회 자원순환의 날

- 9월 6일 '서울 재활용플라자' 에서 쓰레기·플라스틱·1회용품 등 3무[無] 행사로 자원순환 기념식 개최 -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9월 6일 서울 성동구 '서울 재활용플라자'에서 '제10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 매년 9월 6일인 '자원순환의 날'은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환경부가 2009년부터 지정한 날이다.
 - * 9월 6일: '9'와 '6'은 서로를 거꾸로 한 숫자로서 순환의 의미를 부여
- 올해 기념식은 지난 9월 4일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주제로 열린다. 제조·유통 업체, 재활용 업체, 환경단체 등 관계자와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다.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자원의 선순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이라는 미래상(비전) 아래,
 - 생산단계 자원 효율성 제고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 저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재생원료 사용 확대, 미래 폐기물의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등 순환경제형 자원순환 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이날 그간 자원순환 활동에 공로가 큰 기업, 지자체 등에 대한 분야별 시상식도 열린다.

- ‘사업장 폐기물 감량’에서 씨제이제일제당 인천3공장이,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순환골재 우수활용’에서 강원도가 각 부문별로 대상을 받는다.
 - 또한, 지난 5월 10일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올해부터는 ‘1회용품 저감 및 포장재 개선’ 분야가 신설되어 스타벅스코리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첫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 올해 ‘자원순환의 날’ 행사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경각심과 자원순환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제고를 위해 쓰레기·플라스틱·1회용품이 없는 ‘3무(無) 행사’로 진행한다.
- 행사용 현수막, 무대 등은 플라스틱 대신 목재, 종이 등 재활용 소재를 적극 활용하고,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사전에 안내하여 쓰레기 배출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 1회용컵 대신 음수대를 설치하여 통컵(머그컵)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각종 기념품도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재생봉투에 담아준다.
 - 환경부는 이날 행사현장과 참석자 반응 등을 토대로 다른 공공기관, 기업행사 등에도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공식 기념식 외에도 내셔널지오그래픽 매거진과 함께하는 ‘플라스틱의 역습’ 사진전, 한국형 안전한 청소차 전시, 중고물품 나눔장터, 분리배출 체험교실 등 다양한 전시·체험 행사가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 이와 함께 고양시 킨텍스에서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자원순환 산업전’이, 같은 장소에서 9월 7일 ‘폐기물 관리 및 처리기술 발표회’가 개최된다.
- 이어서 9월 11일에는 덴마크 순환경제자문단*(단장 칼스버그 그룹 회장)의 방한을 계기로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한-덴 순환경제 포럼’이 개최된다.
- * 칼스버그 그룹 외 건축 관련 기업,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
- 포럼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토마스 리만 주한덴마크대사, 플레밍

베센바처 칼스버그 그룹 회장 등이 참석하여 양국의 우수 재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순환경제 관련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한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와 함께 9월 6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태양광 폐패널·전기차 폐배터리 관리 등을 논의하는 폐전자제품·폐자동차 사전 국제심포지움(Pre-ISEE^{* **})을 개최한다.

* Pre-ISEE : “Emerging waste stream of Electric batteries and Solar panels”

** ISEE : International Symposium on E-Waste and ELV, '19.5월 제주도에서 제1회 대회 개최

- 벨기에, 미국, 일본, 중국 등 국내외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태양광 폐패널·전기차 폐배터리 관리를 중심으로 폐전자제품·폐자동차 관리를 위한 국내외 제도 및 연구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통해 1회용품 줄이기, 올바른 분리배출 등 생활 속 실천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전 국민이 인식하고, 산업계·공공기관·국민 모두가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참여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0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추진 계획.

- 주 제 :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
- 일 시 : 2018. 9. 6(수), 14:00 ※ 부대행사는 10:00부터 진행
- 장 소 : 서울 새활용플라자(서울 성동구)
- 주 최 : 환경부 / 자원순환의날조직위원회
- 주 관 : 한국폐기물협회
- 행사내용
 - 식전행사 : 자원순환의 날 기념 및 자원순환의 의미 전달과 공유를 위한 공연
 - 공식행사 : 정부포상, 기념사, 자원순환 캠페인 등
 - 부대행사 : 1회용품 저감활동 홍보, 한국형 청소차 개발모델 전시, 중고물품 나눔장터,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분리배출체험학습, 리사이클링아트 전시, 업사이클링제품 전시, 다 쓴 건전지 교환캠페인 등
- 행사규모
 - 참석인원 : 기념식 500여명, 부대행사 등 참석자 약 1,000여명

구 분	시 간	내 용
식전 행사	13:30~	참가자 도착 및 좌석 착석
	13:45~13:55(10')	식전 문화공연
	13:55~13:58(03')	사회자 행사 안내
	13:58~14:00(02')	주요내빈 입장 및 착석
공식 행사	14:00~14:10(10')	개식선언
		국민의례
		주요내빈 소개
	14:10~14:25(15')	정부포상 수여
	14:25~14:35(10')	기념사
		축 사
14:35~14:50(15')	자원순환 캠페인 및 기념촬영	
14:50~	폐식선언 및 내빈 퇴장	
부대 행사	10: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각 주체별 역할 및 참여방안 주제로 구성 - 국민, 생산·유통업계, 정부·공공기관, 재활용 업계별 홍보·전시 부스 운영 o 1회용품 저감활동 홍보, 한국형 청소차 개발 모델 전시, 중고물품 나눔장터,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분리배출체험학습, 리사이클링 아트 전시, 업사이클링제품 전시, 다 쓴 건 전지 교환캠페인 등
연계 행사	'18.9.5~7 / 킨텍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Re-Tech 2018 국제자원순환산업전 - Re-Tech 조직위원회 주최 - 폐기물 관리·재활용 등 관련 기술·제품 전시
	'18.9.7 / 킨텍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자원순환 학술대회 - 한국폐기물협회 주관 - 폐기물 관련 정책 및 기술발표 등

붙임3

부대행사

구분		기관(업)명	내용
정부 - 지자체	환경부	환경부	플라스틱의 반격 사진전(내셔널지오그래픽 매거진), 자원순환기본계획 등 정책 소개
	공공기관	한국환경공단	사업소개, 자원순환체험, 퀴즈/앱설치 이벤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동반중소기업 특허전시, 친환경화분/노트만들기
행사 운영	자원순환의날 조직위원회	자원순환의날 조직위원회	행사안내
자원순환업계 - 단체	자원순환협회·단체	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폐기물처리공정 설명 및 실물전시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재활용제품 및 공정소개, 공제조합 소개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홍보차량 활용한 무인회수기체험, 돌림판 이벤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폐건전지 교환이벤트, 폐건전지 수거함배포, 수거함만들기 행사
		한국전지재활용협회	조합, EPR제도, 분리배출요령 등 소개
생산자 - 유통업계	기업	이디아커피	1회용컵 줄이기 자발적 협약 홍보
		이마트	장바구니 사용
		CJ	자원순환선도기업
	사회적기업	두레협동조합	재활용제품 전시·판매
		아이앰퓨처	사업홍보 및 기념품
		소셜이큐	사업홍보:업사이클링 교육·홍보
	캠페인	자원순환 실천서명 다짐	
국민 - 소비자	자원순환협회·단체	한국폐기물협회	분리배출 체험교육
	자원순환시민단체	자원순환사회연대	자투리천DIY, 에코백만들기, 분리배출놀이
	자원순환협회·단체	서울환경미술협회	환경작품 전시, 중고예술작품 교환, 에코백체험
	자원순환DIY	글라스본	폐유리병 업사이클링제품 전시, 바다유리 만들기
		한국업사이클디자인협회	업사이클링 체험실습→업체선정중
		유도영 작가	인테리어 조명 만들기
		밀키프로젝트	밀키큐브 체험부스 운영
		여미갤러리 “끼리끼리”	양말인형 업사이클링 체험, 전시 및 판매
		쉐어라이트	TV용 LED 업사이클링 홍보
		오운유	자투리 가죽 패션제품만들기
	새봄커뮤니티	업사이클링 가드닝 체험, 전시 및 판매	
나눔장터	푸른내일을 여는 여성들	나눔장터	
어린이 그림그리기	환경실천 연합회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본 포스터는 친환경 재활용지로 제작하였습니다.



♻️ **자원순환의 날 2018년 9월 6일(목) 서울 새활용 플라자[성동구]**

기념식(14:00~14:50)

부대행사(10:00~17:00)

올바른 분리배출체험교육, 자원순환 홍보·전시, 리사이클링아트 전시, 자원순환 DIY, 가족체험 이벤트, 폐휴대폰·폐건전지 교환이벤트, 자원순환실천서명 캠페인, 업사이클제품 전시,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자원순환의 날 연계행사(일산 킨텍스)

폐기물관리 및 처리기술발표회
2018년 9월 7일(금)

국제자원순환산업전(Re-Tech 2018)
2018년 9월 5일(수)~7일(금)

주최 환경부, 자원순환의날조직위원회* 주관 한국폐기물협회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한국건설자원협회,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실천연합회



고교·대학 과정 모든 현장실습생 22만명에 산재보험 적용

- 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질병 보상, 재할훈련·직업교육까지 지원 -

-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대학생 16만명에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직업계고에서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 * 산재보험법 제123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으로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는 근로자에 준하여 산재보험 적용
-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6만명에서 산업현장에 실습하는 모든 현장실습생 22만명으로 확대된다.

【 현 행 】

【 개 정 】

범 위	▶ 직업계고 한정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 한정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확대 * 고등교육법상 현장실습 등 포괄 *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등
규 모	▶ 약 6만명(26.3%)	▶ 약 22만명(100.0%)

- 지난 '98년 제정된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은 당시 그 범위를 직업계고 학생으로 잠정하였는데
 - 이후, 학제 및 취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현장실습이 대학으로도 확대·보편화되면서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사각지대 없이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학생은 누구나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보상범위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을 대상으로 하고

- 보상수준은 치료비 및 휴업급여(최저임금 미달시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 등을 보상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급여도 수급받을 수 있어, 사고 후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의 우려가 크게 해소된다.

- 뿐만 아니라, 재활 및 직업훈련도 제공받을 수 있어 노동시장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 98년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마련 이후,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20년 만에 보호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다”면서

○ “현장실습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의 징검다리”라고 하며, “청년들이 양질의 현장실습 일자리를 거쳐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 고시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u>제105조의3</u>의 규정이 적용되는 현장실습생의 범위와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제123조</u>----- ----- ----- ----- -----.</p>
<p>제2조(현장실습생의 범위) 법 <u>제105조의3</u>제1항의 규정에서 "<u>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u>"이라 함은 법 <u>제5조</u> 및 같은 법 시행령 <u>제3조</u>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에서 <u>직업교육훈련촉진법</u> <u>제7조</u>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p>	<p>제2조(현장실습생의 범위) ----제 <u>123조</u>----- "<u>고용노동부</u>----- ----- <u>제6조</u> ---- ----- <u>제2조</u> ----- ----- <u>직업교육훈련</u>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 ----- --.</p>
<p>제3조(운영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계상함에 있어 임금총액 산정시 당해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 산정</p>	<p>제3조(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한 눈에 보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위한 안내!”

- 현장공무원 ‘10대 민원응대 수칙’ 및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 마련,
위기상황인데… 몰라서 신청 못했던 긴급복지지원 받으세요! -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용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과 공무원들이 숙지해야 할 ‘10가지 민원 응대 수칙’을 마련했다.
 - 지난 7월 ‘미혼모·부 일상 속 숨은 차별 및 불편 사례’에 관한 대국민 접수와 설문조사 결과, 많은 미혼모·부들이 관공서에 방문했을 때 사생활 보호가 안 되고 지원정보 안내가 부족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10가지 민원응대 수칙’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의 현장공무원들이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직접 응대할 때 ‘최소한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라는 사항들을 정리했다.
 - 사생활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할 것(상담실이 없다면 목소리를 낮출 것) ▲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질문 ▲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을 사용하지 말 것 등이 담겼다.
 -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 임신·출산·양육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것(상담전화·시설·민간단체 등 정보 제공) ▲ 생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줄 것 ▲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 교부 등이 담겼다.

-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증명서를 신청하면 된다는 점을 안내해 불필요한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은 미혼모·부, 한부모가 분야별로 이용 가능한 각종 지원제도를 보기 쉽게 표 1장에 담았다.
 - 안내문에는 ▲임신 및 출산 ▲양육 및 생계 ▲주거지원 ▲사회서비스 ▲자녀돌봄 ▲요금감면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안내문 배포를 통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제도를 몰라서 도움을 청하지 못했던 지원의 사각지대는 상당 부분 해소가 기대된다.
 - 일례로, 많은 임신부가 모르고 있지만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임신·출산 상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
 - 각 지원제도별 문의와 신청이 가능한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 등도 안내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과 ‘10가지 민원 응대지침’은 책받침 형태로 제작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될 예정이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이와 더불어, 하반기 동안 권역별 일선 현장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미혼모·부에 대한 불편 사례 및 인식개선 교육과 지자체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 여성가족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모든 아동과 가족에 차별 없는 사회를 이루고, 한부모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달 중 온·오프라인으로 ‘미혼모·부 차별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본격 전개하는 것과 동시에, 차별 및 불편 사례 발굴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는 미혼모·부의 제도권 진입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기 창구로, 현장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이어 “모든 가족이 출산이나 혼인 형태와 관계없이, 소소한 일상 속의 차별과 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장윤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크고 작은 차별과 불합리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라며 “관계부처 협의, 관련 연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등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미혼모·부 등 한부모 지원제도 안내문
 2. 미혼모·부 등 한부모 관련 10가지 민원응대 요령

구분	지원내용	신청문의
임신 · 출산	긴급복지지원 * 임신, 출산, 양육상 생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 긴급복지지원 신청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 국민행복카드 지원	• 보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출산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긴급복지지원대상자) 자녀 1인당 60만원 * (1~6급 여성장애인) 자녀 1인당 100만원	•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 파견(바우처)	• 보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한부모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추가 아동양육비·학용품비·시설입소자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 증명서	•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연결 후 2번)
양육 · 생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검정고시 학습비·고교생 교육비·자립지원촉진수당	•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연결 후 2번)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 출산·양육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자조모임 등	•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연결 후 2번)
	기저귀·조제분유 비용 지원 * 국민행복카드 지원	• 시·군·구 보건소 • 읍·면·동 주민센터
	자녀 교육비 지원 *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	• 읍·면·동 주민센터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 교육비지원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양육비이행 관리원 • 양육비 이행 상담전화 ☎ 1644-6621 (연결 후 1번)
주거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거주지 시·군·구청 •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연결 후 2번)
	무주택 미혼모 매입임대주택 * 관리비 수준 비용만 납부	• 거주지 시·군·구청 •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연결 후 2번)
	공공임대주택 지원 (1순위 또는 기관추천) * 영구임대(50년), 매입·전세임대, 국민임대(30년), 5년·10년 공공임대, 장기전세 등	• 거주지 시·군·구청 • 각 시·도 도시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구분	지원내용	신청문의
사회 서비스	취약·위기가족지원 서비스 * 사례 관리, 자녀 학습·정서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연결 후 2번) • 홈페이지(www.familynet.or.kr)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 이행 상담전화 ☎ 1644-6621 (연결 후 1번)
	미혼모 대안위탁교육 * 위탁교육기관을 통한 학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연결 후 2번)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한부모] 메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1350
	보육시설 우선 입소 * 근로 한부모 1순위 가점	-
자녀 돌봄	아이돌봄 서비스 * 취업 한부모가족 자녀 대상 가점 부여 * 소득구간별 정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콜센터 ☎ 1577-2514
	보건 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 정부 양곡할인 지원(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요금 감면	산업통상 자원부 지역난방·전기·가스요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주민센터 • (전기) 한국전력공사 ☎ 123 • (가스) 해당 지역 가스공급사 고객센터 • 산업통상자원부 ☎ 1577-0900
	환경부 수도요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주민센터 • 거주지 시·군·구 관할 수도사업소 *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 이동통신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50% 감면 * (차상위계층) 35%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주민센터 • 각 해당 이동통신사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이용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 1544-3412 • 문화누리 홈페이지(www.mnuri.kr) • 상담·문의 ☎ 02-410-1298~9 • 홈페이지(http://svoucher.kspo.or.kr)
	법무부 과태료 50% 이내 감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과태료 부과 행정기관 • 법무부
	한국교통 안전공단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 (한부모가족) 8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 ☎ 1577-0990
	지자체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자체별로 지원내역이 상이할 수 있음

1. 미혼모·부 등 한부모 상담 창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해주세요
2.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 상담실이 없을 경우 목소리를 낮춰서 응대해주세요.
(사생활 보호를 위해)
3.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문(아이 아버지, 원가족, 가정사 등)은 삼가 해 주세요.
4.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반말을 사용하지 말고 인권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해주세요.
5. “안돼요, 모르겠는데요.” 보다는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등의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민원인의 입장에서)
6.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후원물품 수령 시 등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7.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에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를 사용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주세요.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증명서 발급)
8. 임신·출산부터 양육까지 전과정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가족콜 1644-6621 및 미혼모부자 시설, 미혼모지원 민간단체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9.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임신, 출산, 양육상 생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세요. (시·군·구별로 조례에 규정)
10. <한부모에 대한 지원제도 안내문>를 교부해주세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간 차별없이 이용

- 지자체별 상이한 운영 방식·절차의 최소기준 및 표준절차 마련 -

-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은 365일 24시간 원칙
- ◆ 요금(관내)은 도시철도/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내 수준
- ◆ 인접 지자체까지 운행하는 것을 원칙
- ◆ 휠체어 이용 않는 교통약자 위해 택시(바우처) 적극 활용

□ 앞으로 휠체어 탑승장비 를 장착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운영되어 지역별로 서비스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 특별교통수단 :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8항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표준조례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 요금수준, 운행범위 등에 대한 최소기준 및 표준절차 등을 명시한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조례)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적극 검토*되어 왔으며,

* 「이동불편 교통체계 개선기술 개발」 : '15.8~'19.6, 연구총괄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17.11월부터 지자체, 관련 전문가 및 교통약자 관련단체 등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친 세미나,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의 의 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 표준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운행방식

- 이용자 특성, 차량부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에 임차.바우처 택시를 적극 도입하고, 특별교통수단(휠체어 승강장비 有)과 임차.바우처 택시(승강장비 無)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별교통수단등 차량 유형 >

구분	특별교통수단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임차택시)	일반택시 (바우처택시)
휠체어 탑승설비	있음	없음	없음
운행주체	지자체	지자체	택시사업자

② 이용대상 심사

-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기 위한 자격과 관하여 대중교통 이용 관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심사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하였다.

③ 이용시간

- 상시(365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상 상시 운영이 곤란한 지자체는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계획을 명시토록 하였다.

④ 이용요금

-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상한선을 대중교통요금* 기준으로 2배 이하로 명시하되, 여건에 따라 즉시 시행이 곤란한 지자체는 별도 시행 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하도록 하였다.

* 관내요금 : 도시철도 또는 시내버스요금의 2배 이내
관외요금 : 시외버스요금의 2배 이내

⑤ 운행지역

- 관할 행정구역 이외 인접생활권*까지를 기본 운행지역으로 하되, 차량여건이나 수요 등에 따라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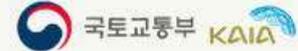
* 인접생활권 : ① 행정구역이 연접한 지자체 ② 기초 지자체의 경우 도내 전체 ③ 수도권 내 지자체의 경우 동일 생활권으로 볼 수 있는 수도권 전체

□ 박무익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표준조례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체계 하에서 적용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부족 등 불편사항을 일시에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면 교통약자가 거주지에 따른 차별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또한, “장애인 등급제의 개편(19.7, 복지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법정 보급대수의 재산정 등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 마련



현황 및 문제점

차량 대기시간

콜택시신청 후, 차량 도착 시까지 긴 대기시간

차는... 언제 오지?

차량 운행범위

지자체 마다 서로 다른 운행범위

집에 되돌아 갈 수가 없어..

콜택시 이용요금

지자체 마다 서로 다른 요금수준과 요금체계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
부족해요

콜택시 운영시간

지자체 마다 서로 다른 센터·콜택시 운영시간

꼭 필요할 때, 이용을 못하네..

표준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대상·자격 명확히 하자 · <p>표준화된 자격심사절차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형태로 운행하자 · <p>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방식, 종류에 따라 정의·분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우처 택시를 활용하자 · <p>휠체어이용자 특별교통수단 비휠체어이용자 바우처택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행지역·범위 재정립하자 · <p>운행지역 및 범위 규정, 광역 이동시 운행방식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 <p>상시 운영기준 제시 (1년 365일, 1일 24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금 수준 가이드 제시하자 · <p>관내/관외요금 상한선 제시 (대중교통요금의 2배 이내)</p>

어촌뉴딜300사업, 우리 어촌도 신청할 수 있을까?

- 11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 개최, 사업 공모절차 등 안내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1일(화)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어촌뉴딜300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이를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까지 총 300개소의 어촌·어항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2019년에는 발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시급한 지역 등 70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기에 앞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에서는 어촌뉴딜300사업의 주요 내용과 2019년도 어촌뉴딜 300 사업대상지 선정계획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공모 방법과 앞으로의 추진일정 등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공모기간은 9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5주간)이며, 서류심사·현장평가·종합평가를 거쳐 2019년도 사업대상지를 연말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평가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부단장은 “어촌뉴딜300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 사업의 성공여부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사업추진 의지에 달려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와 관련된 문의는 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044-200-6174,619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